

# '알박기'로 지역현안 견제...정부요직 호남 철저 배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광주·전남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난항을 거듭해 왔다.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이들 사업은 새 정부의 무관심과 견제, 그리고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제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더라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내부에서도 호남 출신 인재들이 주요 임명직에서 배제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민통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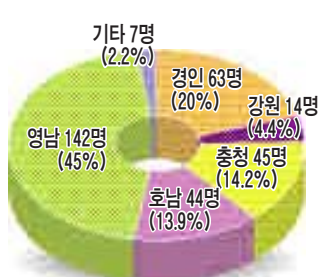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1년간 호남 인사 소외는 정부 기관 곳곳에서 극명했다. 청와대 인사라인과 사정기관장을 영남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면서 정부조직 및 공공기관, 금융공기업 등 인사에서 '영남 우대-호남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 요직 45% 영남출신 장악 청와대 고위직 호남 전무

### 영남편중 인사

◇요직 322명 중 영남 출신 45%, 호남의 3배 넘어=민주당 정책위와 김진표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이후 2009년 2월까지 단행한 2원·15부·2처·18청·5위원회 정부조직의 장관(급)·차관(급),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등 322명의 인사를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이 142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경인 63명, 충청 45명으로 집계됐다. 호남 출신은 44명(13.9%) 밖에 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1년 요직 322명 인사 출신지별 분포 (2월 현재, 7명 미확인)



이를 현 임용자들의 평균 출생연도와 가장 근접한 지난 1949년의 인구 통계(영남 31.4%, 호남 25.2%)와 비교하면 영남 출신은 13.6%포인트 과다 대표됐고, 호남 출신은 11.3%포인트 과소 대표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방대학 출신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서도 영남대 9명, 경북대 8명, 부산대 7명 등 영남지역 대학출신이 24명이나 된 반면 호남지역 대학출신자는 7명에 불과했다.

◇청와대 인사라인 영남 장악=청와대 인사라인은 대통령실장 직속 인사비서관실과 총무비서관실 산하 인사팀 등 2개 조직으로 일반화된다. 이 2개 조직의 절반 이상이 대구·경북(TK)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청와대 인사 담당자의 80%가 영남 출신이었다. 반면 호남 출신은 전무했다.

현 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실'은 경북 출신인 김명식 인사비서관을 포함해 행정관급 이상이 10명이다. 이 중 영남 출신이 8명(TK 6명)이었으며 나머지 두 명은 충남과 제주 출신이었다.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권력의 상징이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장은 100%가 영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경북 영주 출신이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경남 남해 출신

이었다. 또 임채진 검찰총장은 경남 남해,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북 안동 출신이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은 경북 성주 출신일 뿐 아니라 어청수 전 경찰청장감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도 영남 출신이었다.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봉화 출신이고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남 고성 출신이었다. 다만, 김황식 감사원장이 전남 출신이고 국제정장은 현재 공석이다.

◇금융공기업 편중=금융 공공기관장의 출신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4개 기관 중 영남 출신이 16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명(12.5%), 충청 2명(8.3%), 호남 2명(8.3%), 인천 1명(4.2%) 등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 등 총 15명 중에서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73%를 차지했다. 이들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경북 예천),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경남 하동), 이종휘 우리은행장(대구), 임주재 주력금융공사 사장(경북 안동), 진영욱 한국투자공사 사장(부산), 정연태 코스콤 사장(경북 울진),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대구), 정연길 서울보증보험 감사(경북 포항), 이승문 산업은행 감사(경북 칠곡), 김준호 기업은행 감사(경북 구미), 조현명 우리은행 감사(경남 산청) 등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은 전북 출신이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J프로젝트

전남도 최대 현안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는 지난 19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가 모두 6개의 사업대상지구 가운데 2곳의 개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4년여 만에 가까스로 분궤도에 오르게 됐다.

개발계획이 승인된 곳은 삼호(9.2km)와 구성(21.8km)지구 등 2곳으로, 전체 면적이 여의도 면적(8.5km)의 4배에 이른다. 전남도는 앞으로 이들 2곳이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기업도시로 지정받게 되면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 사업 면적 줄여 4년만에 겨우 개발계획 승인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J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을 남겨두고 있다. 간척지 양도·양수를 둘러싼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와 농식품부는 해남과 영암일대의 간척지 활용방안과 양도·양수 방법을 놓고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조성된 간척지의 일부를 J프로젝트 사업부지로 활용하려는 전남도의 입장과, 농지로 이용하려는 농식품부의 방침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다, 양도·

양수 비용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최근엔 J프로젝트 개발예정지구 가운데 한 곳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J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알박기'를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J프로젝트를 당초 개발예정 면적의 3천만 평의 3분의 1수준인 1천만 평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운명

을 바꾸기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J프로젝트는 외자유지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J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호남고속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기대를 모았던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은 '반쪽 공약'으로 전략락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예산과 공법, 환경 문제 등에 따라 오송~광주 구간을 오는 2014년께에나 완공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광주~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 등에 따라 최종 완공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송~광주~목포 구간의 완공 시기는 빨라야 2015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오송~광주~목포 구간의 2012년 완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처럼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2년 완공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무려 3조원대의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린 영향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불어닥친 경제난으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상황인데다 제대로 쟁길만한 지역 인맥이 없어 후순위에 밀렸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해양부는 아직까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을 위한 수정 기본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2012년 조기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구간을 제주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타당성(B/C)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2시간26분, 목포에서 제주까지 40분 정도가 소요돼 4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조원의 임금유발효과, 3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과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서울~호남~제주를 잇는 호남축은 21세기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데다 기존의 경부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사업에 대해 초광역 개발 계획인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물 건너간 조기완공...제주 연결 현실화 필요

Advertisement for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and '무안 - 상해(방콕) 직항!!'.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 in a yellow shirt and a banner with flight information. Text includes: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비장 무료이용', '속편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문화항공 상점입니다 www.kpmc.or.kr', '가족의 때까지 상품과 치안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광주MBC문화항공',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문의 062-226-6070'.